美 민주당 의회 장악 호재… 韓 반도체 투자 압박 지속될 듯

정치 교착에 신규 규제·증세 제동
외국기업 투자 합의 검토 강화 우려
데이터센터 규제에 신규 수요 변수
AI 투자 급랭 땐 반도체 업황 타격
美 금리안정 시 아시아 자금 유입 기대


3일(현지시간) 애틀랜타에서 열린 선거의 밤 행사에서 조지아주 민주당 주지사 후보 키샤 랜스 보텀스가 발언하고 있다. 키샤 랜스 보텀스는 이날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주지사에 당선된 흑인 여성이 됐다. /뉴시스

"미국 중간 선거 이후 의회와 행정부의 교착상태가 새로운 규제와 증세를 제한해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와 대미 투자 압박에 대비해야 한다."

톰 오를릭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일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한 '2026 미국 중간선거 및 거시 전망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민주당이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하원에 이어 상원 다수당 지위도 확보했다. 야당의 상·하원 동시 탈환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원에서 과반인 51석을 확보했다. 하원은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CNN과 NBC가 민주당의 과반 확보를 예측했다.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 변수… 기존 주문보다 신규 수요 주목

오를릭 수석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줄 변수로 미국 주 정부의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를 꼽았다. 데이터센터 가동에 따른 전기·수도 요금 상승을 우려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건설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의 주지사들이 건설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위험은 한국 반도체 업계의 기존 주문보다 향후 주문과 수익성에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질의응답에 참여한 권효성 블룸버그 박사는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이 어려워지더라도 이미 건설 중인 사업까지 영향을 받기는 쉽지 않다며 기존 투자는 비교적 견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를릭 수석도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관련 자본 투자가 이어지는 상황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AI 투자 열기가 급격히 식는 경우에는 한국 경제의 충격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주가가 20% 하락하고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동시에 데이터센터 자본지출이 1년간 중단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한국과 대만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를릭 수석은 "AI 붐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한국과 대만이 그 붐이 불황으로 바뀌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합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에 집중하면서 미국 정부의 민간기업 지분 취득과 외국 기업의 투자 합의를 엄격히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간선거 결과가 더 강력한 관세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 박사도 미국이 무역정책을 추가로 강화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대만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내 투자 확대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중심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도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가·AI 자산이 美 금리 좌우… 금리 안정 땐 자금 유입 가능성

오를릭 수석은 한국 증시의 급격한 조정에 레버리지 문제와 AI 투자에 대한 시각 변화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상반기 수익을 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부 자금을 미국으로 회수한 점도 하반기 한국 시장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과 달러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는 이란 전쟁과 AI 관련 자산 가격을 제시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로 상승하고 AI 관련 자산 가격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면 연준이 오는 12월과 내년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유가가 배럴당 60~70달러로 내려가고 AI 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장기적으로는 은퇴 인구 증가와 미국으로 유입되는 저축 규모 감소가 높은 금리 수준을 뒷받침할 것으로 분석했다.

권 박사는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한국 장기금리도 영향을 받겠지만, 한국의 명목성장률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재평가로 상승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AI 관련 투자 흐름이 이어지고 미국 금리가 추가로 오르지 않으면 아시아로 자금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美 재정 확대 제동에 국채금리 안정… 코스피 상승 기대

대신證, 국채금리 5~10bp 하락 전망
코스피 저평가·실적 개선 매력 부각
4분기 코스피 5200~6700선 제시
뉴욕 증시 상승 기대 속 중동전쟁 변수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미국 의회 권력 재편에 따른 재정정책 변화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스윕(Blue Sweep)' 성과를 거두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대규모 감세(재정 3.0)와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레드스윕(공화당 압승)' 시나리오 속 국채 발행 폭증 및 재정적자 심화 우려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도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탈환을 넘어 상원 다수당까지 차지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최근 '발작'을 일으키며 국내 및 글로벌 증시를 뒤흔든 미국 국채 금리로 향한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민주당의 양원 장악이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기간프리미엄의 하향 안정세(-5~-10bp 내외)를 유도할 것으로 진단했다. 과도한 국채 공급 부담이 줄어들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독립성이 상원의 인사 인준권을 통해 방어되면서, 국채 공급 부담과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면에서는 블루스윕만으로 미국 국채 발행 부담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국가부채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120%를 넘어선 상황인 만큼, 재정지출을 일부 줄이더라도 막대한 이자 비용 등으로 인해 국채 발행 구조 자체를 바꾸기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블루스윕 상황에서도 재정적자 축소 폭은 GDP 대비 약 1%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봤다.

국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코스피는 미국 중간선거이후 1년 동안 9번 중 6번 상승세를 보여왔다. 다만 미국 의회 구도보다는 국내 이익 사이클이 성과를 주도했다는 변수가 존재했고, 올해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소득 증가와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상대적 안전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027년 예상 주당순이익(EPS)이 34% 증가하고 주가수익비율(PER)은 4.2배 수준에 불과해 '저평가와 이익 증가'라는 강력한 조합을 갖추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본격적인 증시 재평가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4분기 코스피 전망치는 5200에서 6700포인트로 제시했다.

뉴욕 증시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1950년 이후 S&P500지수는 19번 선거가 끝난 뒤 모두 상승했으며, 평균 수익률은 약 15%를 기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UBS도 계절적 특성, 헤지펀드의 낮은 주식 보유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중간선거 이후 미국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 역시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조정 국면이 마무리되면서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다만 에버코어ISI는 민주당의 양원 장악에 선거 결과를 둘러싼 분쟁과 이란 군사작전 확대까지 겹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S&P500지수가 연말 680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중동전쟁은 변수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쟁 격화 혹은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중단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한미 관계 변수… 청와대, 통상·안보 대응 고심

대통령비서실장, 정책 변화 분석 지시
트럼프 관세 기조 유지 가능성 여전
쿠팡·빅테크 현안 등 美 압박 우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을 확보해 압승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청와대도 선거 결과에 따른 통상·안보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정책에 제약이 커질 수 있어, 대비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참모진에게 미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통상·안보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미국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 다수당을 탈환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미국 관세 정책과 한미 안보협의 등에 미칠 영향도 변동이 예상된다.

다만 미국 의회 권력 지형이 바뀌더라도 한미 간 해결해야 할 통상·경제 현안이 많다. 대미(對美)투자 1호 프로젝트는 합의했지만, 알래스카 LNG사업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한미 간 불편한 기류가 흘렀다.

쿠팡 사태 등 미국은 기업 현안에서도 거센 압박을 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한미 간) 쿠팡도 있고, 그 외에 구글이나 애플 등 여러 회사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문제들은 미국이 의회 측을 통해 압박을 가해 우리 정치권에서도 우려했다.

하지만 관세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관세 철회를 위한 법을 통과시켜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CBS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에 축하를 전하며, 국익을 위해 여러분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나의 (중간선거 결과) 메시지"라면서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법안들을 보내올 것이고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는 만큼 한국의 대미투자 부담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민주당이 한미 무역·투자 합의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투자 자금의 집행 과정도 감시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우리 측에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앞세우기 용이한 환경이 될 수 있다. 큰 영향을 받는 쪽은 안보분야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 기자 syj@